



29일

이날 감사에서 與黨의원들은 환경운동리프의 보급, 분산된 환경행정, 오염원화 문제, 소대기차리대차 등 환경오염방지 및 행정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정부측의 보다 확고한 의지전달을 강조한 반면 野黨의원들은 ▲환경영향평가를 어기면서 진행중인 팔미정의 사후관리대책 ▲동양화학群山TDI 공장 이전부제 등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있는 각종 「무제전」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의 심도있는 반영을 절박히 촉구했다.

群山TDI의 원(원)과 산인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문제와 관련 「대기오염 방지법」과 배출부담금징수 등을 강화하고 한편 공해방지시설투자에 관련법을 강화하는 등 소수기업에 대해서도 환경관리기구의 설치 강화 등에 있어도 보다 수평적으로 평등을 할지라도 촉구했다.

群山TDI의 원(원)과 「아고」가 반(반)의 처리수치 이상인 경우 당 부문의 반(반) 처리수치를 초과하는 지 200을 초과하는 경우 카르복-

남·은·은·리·아·연·비·소 등의 물질이 토양자연을 오염 수치를 훨씬 웃돌고 있다」고 밝히고 「토양의 중금속 오염도는 환경기준조차 없는 데 이예대한 환경기준치 설정계획은 없다」고 말했다.

주 의원은 群山 전체주민의 63%가 반대서명한 동양화학TDI 공장건설계획을 백지화할 등의

群山 環境처장관은 「지난 3월 공표장에 대한 환경성 검토기준이 개정된 이후 건설이 허가된 35개 공표장 가운데 27개 공표장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」고 말하고 「해당市·道지사에게 공표장이 그 기준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」고 답변. 群山TDI 공장 건설과 관련된 TDI 공장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공장가동시 포스젠가스가 누출될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것」이라고 시인했다.